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한 공고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위한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2023. 1. 1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잠 정 동 의 의 결 안

I. 사건의 개요

1. 신청인¹⁾ 현황

- ①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Broadcom In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더 파크 드라이브 1320
(1320 Ridder Park Drive, San Jose, California 95131, United States)
대표자 사장 및 최고경영자 혹 탄(Hock Tan)
- ② 브로드컴 코퍼레이션(Broadcom Corporation)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더 파크 드라이브 1320
(1320 Ridder Park Drive, San Jose, California 95131, United States)
대표자 최고경영자 혹 탄(Hock Tan)
- ③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Avago Technologies International Sales Pte. Limited)
싱가포르공화국 7 이슌 애비뉴 1(1 Yishun Avenue 7 Singapore, 768923 Singapore)
대표자 이사 혹 탄(Hock Tan), 임원 클라리스 차잉(Charissa Ching),
임원 찰리 카와스(Charlie Kawwas), 이사 아이비 풍(Ivy Pong)
- ④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매현로 16, 7층(양재동, 하이브랜드 빌딩)
대표이사 커스텐마그레타스피어스(Kirsten Margreta Spears)

2. 심사경위

2020. 6. 10. : 신고서 접수
2020. 9. 10. : 사건 착수보고
2022. 1. 26. : 심사보고서 상정
2022. 7. 13. : 동의를결 신청

1) 신청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 또한 다른 사업자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생략한다.

2022. 8. 26. : 동의를결 절차 개시 심의
2022. 8. 31. : 동의를결 절차 개시 결정
2022. 9. ~ : 잠정동의를결안 작성

II. 동의를결 대상행위 및 적용 가능한 법²⁾ 조항³⁾

1. 행위사실

신청인들은 2020년 2월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발주물량의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하여 스마트기기⁴⁾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라 한다) 체결을 강제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신청인들과 ① 2021년부터 향후 3년간 신청인들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6억 달러 이상 구매하고, ② 실제 구매금액이 위 7.6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LTA를 체결하였다.⁵⁾

2. 적용 가능한 법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이하 ‘법’이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들이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법 제89조 제4항)

4) 스마트기기(Smart Device)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통신수단을 통해 데이터통신, 인터넷 검색, 멀티미디어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기기(Consumer Device)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기기는 통상 ① 스마트폰, ② 태블릿 PC, ③ 이에 연결되어 신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로 구분된다.

5) 신청인들과 삼성전자는 LTA 계약 기간(2021. 1. ~ 2023. 12.) 중인 2021. 8. 17. LTA를 2021. 7. 2.자로 소급하여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시정방안의 내용

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시정방안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 에게 부품의 선적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부품 공급계약 체결 또는 수정·변경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품선택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거래조건으로 부과하는 행위 금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감독관 임명·운영 ○ 임직원(주요 의사결정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the Consent Order Tracker) 구축 ○ 익명 질의 및 위반 신고 절차, 징계 규정 등 마련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	반도체/IT 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지원	○ 지원규모: 200억 원 ○ 지원내용 <운영주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 국내 대학(원)생 및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 2)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 지원 - 팹리스 특화 지원 인프라 구축(사무공간 등) - 시제품 검증 환경 구축(테스트보드, 계측장비)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관련 약속	○ 구매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 제공 ○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

나. 상세 내용

1)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신청인들은 국내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①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②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③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신청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RFFE, 커넥티비티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협력사에 대하여 구매주문이 승인된 부품의 선적중단, 구매주문에 대한 승인 중단, 선적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공급 중단 행위’라 한다)와 같은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신청인들과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스마트기기 제조사 간 부품 공급계약⁶⁾으로, 거래상대방의 부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본 사안에서 문제된 계약 형태인 ‘장기계약(LTA)’ 이외에 부품 공급계약 일반에 대해 공급 중단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신청인들 외에 협력사를 통해 비직납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시정방안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외에 국내외 협력사에 대한 공급 중단 역시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한다.

한편 신청인들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위에서 열거한 공급 중단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이내에 그 상세 내용(거래상대방, 대상 부품, 중단 시기, 중단 사유, 중단의 해소 여부 등)과 관련 자료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6) 신청인들과 거래상대방 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RFFE, 커넥티비티 부품의 공급 관련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 계약, 양해, 조항, 조건 또는 서면 정책(agreement, contract, understanding, term, condition, or written policy)을 포함한다. 또한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또는 정식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나)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신청인들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i)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RFFE 및 커넥티비티 부품에 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ii)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거래조건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품의 설계 결정 또는 구매 결정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택권 제한은 위 i)에서 제외한다.

신청인들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이내에 그 상세 내용(거래상대방, 대상 부품, 계약 또는 거래조건의 내용 및 부과 경위, 해소 여부 등)과 관련 자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신청인들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 및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한다.

먼저 신청인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antitrust compliance officer)을 임명·운용한다.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은 신청인들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antitrust compliance committee)의 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신청인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따른 신청인들의 의무사항과 신청인들의 영업활동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하며, 매년 1회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3년간 실시하도록 한다.⁷⁾

7) 신규 또는 전근된 관련 임직원은 연간 진행되는 정기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과 별도로, 자신의 역할이 신청인들의 본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준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아울러 신청인들은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the Consent Order Tracker)⁸⁾”을 도입하여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 관련 신규 계약의 체결 및 기존 계약을 수정·변경할 경우 담당 직원은 계약의 내용과 사유를 등록하여야 하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동의의결 시정방안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질의하거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및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절차 등 내부 규정을 갖추도록 한다.

2)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기업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방안

가) 반도체/IT 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지원(200억 원)⁹⁾

신청인들은 반도체/IT 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지원 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하여¹⁰⁾ 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② 중소 팹리스(Fabless)¹¹⁾ 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있는지에 대한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 8)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된다. ① 직원들이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부품에 관한 거래상대방과의 신규 계약(또는 기존 계약의 수정·변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신규 계약 체결(또는 기존 계약의 수정·변경)의 이유를 포함하여 전자 저장소에 등록하여야 하고, ②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본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을 위해 최소한 분기별로 해당 저장소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의 전자 저장소에 포함된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입력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된다.
- 9) 상생방안은 상업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수혜자에게 최소 비용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생기금의 주요 활용방안 및 세부적인 예산안은 신청인들이 제시한 잠정안이다. 각 사업별 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집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넘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다.
- 10) 신청인들이 상생기금을 출연하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세부 계획 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자율적,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상생기금 관련 업무에 따라 신청인들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상생기금(200억 원)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비용으로, 신청인들과 한국반도체협회가 협의하여 비용 지급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
- 11) 제조 설비를 뜻하는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과 리스(less)의 합성어로,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를 말한다.

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약 77억 원) : 신청인들은 한국반도체산업 협회를 통하여 “(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대학(원)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여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i) 교육 운영, ii) 교육 시스템 구축, iii)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교육 운영’의 경우 글로벌 선진 반도체 기업 재직자 및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교육 대상자는 반도체 분야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이며,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맞춤형·실습 병행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 훈련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중소·중견 기업의 재직자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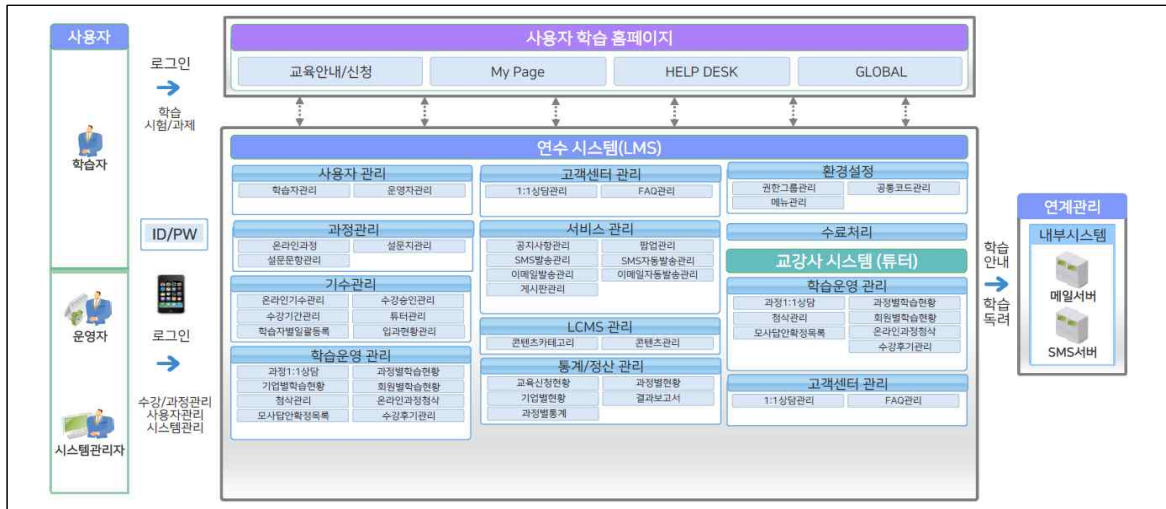
<표 1>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교육대상: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연 150명, 5년간 총 7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희망자) 학부 4학년생, 졸업(예정)자, 석·박사과정생 - (재직자) 신입자, 경력자 등 ■ 교육기간: 단기(2주 내외), 중·장기(1~2달 내외)

다음으로 ‘교육 시스템 구축’의 경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설계, 공정,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온라인에서 상시 학습하고, 체계적인 교육생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교육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및 콘텐츠를 마련한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반도체 산업분야별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을 이용함으로써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반도체 공정 장비 교육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표 2>

반도체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예시)



마지막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교육 운영을 위한 중·대형 교육장, 프로젝트 실습환경, 회의실 및 사무환경을 구축한다.¹²⁾

<표 3>

교육 시설 구축안(예시)

대강의실/세미나실 (100명 규모)	중강의실 (50명 규모)	프로젝트실 (검증보드 등 실습지원)	강사 공간 (행정사무실 포함)
	소강의실 (20명 규모)		회의실

반도체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5개년도의 잠정 예산안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예산안(잠정)

(단위 : 백만 원)

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3,040	1,125	1,125	1,125	1,325	7,740
- 교육운영	320	230	230	230	230	1,240
- 교육시스템 구축	1,270	320	320	320	320	2,550
- 교육인프라 구축	1,450	575	575	575	775	3,950

12) 교육시설은 2023년 2월 준공될 제2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1개층(약 300평)을 활용할 예정이다.

②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 지원(약 123억 원) : 신청인들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하여 창업초기 국내 중소 팹리스기업에 전주기적 성장 지원(incubating)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팹리스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구체적인 상세 운영은 i)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ii)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팹리스 지원에 특화한 “(가칭) 혁신설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혁신설계센터는 2023년 2월 준공될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의 1개층(약 1,000평)을 활용하여 입주 기업용 사무공간 20개 실, 회의실, 교육장, 계측/실험공간을 갖춘 사무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¹³⁾

혁신설계센터에 입주하는 기업¹⁴⁾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또는 창업예정자)이 대상이며, 입주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이고, 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의 경우 창업초기 및 중소 팹리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검증 환경 구축¹⁵⁾ 및 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시제품 기능·성능 검증을 위해 필수적이나 고가 장비로서 창업 초기 기업이 개별 구축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테스트보드, 계측/측정 장비를 갖춘 검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창업초기/중소 팹리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제품개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3)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2022년 말 혁신설계센터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한 후 2023년 6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 입주 기업은 지원을 받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선정한다.

15) 검증환경의 장비 구성은 전문가/입주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표 5>

검증환경 구축(안)

		
FPGA검증보드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어날라이저

국내 중소 팹리스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5개년도의 잠정 예산안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 지원 예산안(잠정)

(단위 : 백만 원)

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계
국내 중소 팹리스 창업·성장 지원	5,900	2,660	1,100	1,100	1,500	12,260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2,900	1,100	1,100	1,100	1,500	7,700
-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	3,000	1,560	-	-	-	4,560

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관련 약속

신청인들은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commitment)하기로 한다.

신청인들은 삼성전자의 신청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한다.¹⁶⁾

16) 참고로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내용(영문)은 다음과 같다.

The Applicants commit to Samsung, as to orders placed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nother on its behalf) and the provision of technical support, that they shall continue to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supply Components and provide support for such Components that is in line with the supply and support levels that they provide to

또한 신청인들은 삼성전자가 2020. 3. 27.부터 2021. 7. 2.까지의 기간¹⁷⁾ 동안 주문하여, 2022년 3월 이전¹⁸⁾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또는 제품 모델에 탑재하는 신청인들의 RFGE 및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하여, i) 삼성전자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부품의 선적 시점¹⁹⁾으로부터 3년 기간의 품질보증(warranty)을 적용하고²⁰⁾, ii) 3년의 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한다.²¹⁾²²⁾

similarly situated customers of the Components

17) 신청인들과 삼성전자가 LTA를 체결한 때부터 최종 효력을 종료하기까지의 기간이다.

18) 갤럭시 Z폴립3(2021년 8월 출시), 갤럭시 S22(2022년 2월 출시) 등이 포함된다.

19)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가 지정한 협력사에 해당 부품이 선적된 시점을 의미한다.

20) 품질보증의 조건은 기존에 정해진 품질보증의 조건에 따른다.

21) 다만, 해당 기술지원은 신청인들이 합리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기술지원의 제공 가능 여부, 조건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22) 참고로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내용(영문)은 다음과 같다.

- (1) Applicants commit to Samsung to provide, at no cost to Samsung, a three (3) year warranty for all WSD and WCC components that are included in products currently being shipped commercially by Samsung and that were ordered by Samsung between March 27, 2020 and July 2, 2021 for use in products or product models launched and commercially shipping on or before March 2022, which warranty period shall be measured from the time such components are/were shipped to Samsung (or to Samsung's authorized designated recipient), and per the terms of the original warranties. For purposes of clarit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such components to the extent they may be used in products or product models launched after March 2022.
- (2) Applicants will commit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on a commercially reasonable basis to Samsung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for all WSD and WCC components that are included in products currently being shipped commercially by Samsung and that were ordered by Samsung between March 27, 2020 and July 2, 2021 for use in products or product models launched and commercially shipping on or before March 2022, which technical support period shall be measured from the time such components are/were shipped to Samsung (or to Samsung's authorized designated recipient), provided and to the extent that Broadcom is reasonably able to provide such support, which determination (together with the terms and compensation required to provide such support, if able) will be made upon discussion on a case by case basis. For purposes of clarit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such components to the extent they may be used in products or product models launched after March 2022.

2.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가. 세부 이행계획

각 방안별 이행계획²³⁾은 아래 <표 7>과 같다. 이 중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기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은 각각 3년 또는 5년간 이행한다.

<표 7> 시정방안 별 이행 시기

구분	주요 내용	이행계획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의결서 송달일 후 즉시 이행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의결서 송달일 후 즉시 이행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의결서 송달일 후 30일 이내 시스템 구축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	반도체/IT 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지원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5년간 이행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관련 약속	의결서 송달일 후 즉시 이행 부품 선적 시점부터 3년 동안 적용

나. 이행점검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건 시정방안의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등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 제90조 제7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신청인들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23)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지원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적인 이행결과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구체적인 이행점검·보고 방법은 아래 <표 8>과 같다.²⁴⁾

<표 8>

이행점검·보고 방법

1. 신청인들은 본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에 관하여 5년간 다음과 같이 이행결과 보고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 가. 신청인들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i)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의 임명, ii)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iii)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 도입, iv) 익명질의 및 위반 신고 절차, 임직원 징계 등 내부 규정 마련과 v)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관련 약속, vi) 반도체/IT 산업분야 중소기업자 지원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향후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이후 신청인들은 매반기 종료 후 1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i)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신규 계약 또는 수정계약의 목록과 그 사본, ii) 임직원들에게 대한 교육을 위해 취한 조치, iii) 임직원들이 동의의결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iv)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시스템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신청인들이 문제점을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v) 거래상대방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내 법무부서 또는 사외 변호인으로부터 수령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신청인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본 건 부품의 공급 중단 행위를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조건 또는 신청인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중 빠른 날 이내에 그 상세 내용(거래상대방, 관련 제품, 경위, 해소 여부 등)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4) 신청인들은 이행점검·보고와 별도로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라. 신청인들은 본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보고서에는 위반 행위 관련 거래상대방, 관련 제품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해결방안,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반도체/IT 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지원’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고 매반기 종료 후 1주 이내에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면점검,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시정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체적인 이행점검 · 보고방법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들은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